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통합 추진 연합회, 도의회에 상생발전 조례안 제정 촉구

상생발전 조례안은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완주·전주 통합 추진 연합회(대표 이재호 전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는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도의회 의원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전북의 낙후와 천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완주·전주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은 전국 14개 광역시·도 중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 인구는 250만 명에서 150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며, 매년 약 1만명의 청년이 지

역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북자치도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민선 87기의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광주·대전이 주변 지역과 통합해 광역시로 승격하고, 청주시가 청원군과 합쳐 충청권 중심도시로 성장한 사례를 볼 때,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발전의 필수 과제라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특히, 현재 전국에서 같은 생활권 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전주와 완주뿐이다. 연합회는 “전북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강력한 거점도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광역권을 형성하고 발전하려면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출범이 필수



완주·전주 통합 추진 연합회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실에서 문승우 의장 등과 면담을 나눈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적”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전북도의회에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관련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정할 것과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추진을 위해 법

합 특례시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계획에 반영할 것과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연구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전북일보 여

론조사에서 전북도민의 78%가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례 제정과 연구 용역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 추진 연합회는 “전북은 현재 역사상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과감한 변화와 혁신만이 전북의 붕괴를 막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990년대 전북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12,800명의 진안군민이 희생하며 용담댐 건설을 이뤄낸 사례를 언급하며,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는 전북 발전을 위한 ‘제2의 용담댐’과 같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시군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 관련 조례안’ 원안을 재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만호 기자

“교원 건강·학생 안전 보장 대책 마련 시급”

김성수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교원의 건강과 학생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범행 직전 교내에서 기도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교원의 건강검진 등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휴직, 치유·복귀 등 맞춤형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폭력성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이 발견되면 즉각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이번 건의안 발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김정기 도의원,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 촉구 건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3개 시군의 통합을 뜻하는 게 아니냐”라고 강조하면서, “현행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외형과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 시군이 새만금 발전을 위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체를 위한 사전 단계로 특별지방자치체 합동 추진단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7)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제사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을 ‘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의원외교연맹구성과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의원외교개념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원외교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2036 올림픽 유치 총력”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 브리핑 통해 이번주 도정 현황 공유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이 지난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도정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도정 주요 일정과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4일부터 26일까지 남원, 무주, 임실, 부안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오후 2시에는 덕진소방서 조춘 119안전센터 개칭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2시 50분에는 라한호텔에서 ‘농촌 기반 사회 정책 포럼’이 열린다. 또한, 민생경제 살리기 관계기관 대책회의 2차 회의가 개최되며, 전북도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도 참가해 K-FOOD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낮 12시에는 전주대학교에서 전북연구원 성과공유회가 열리며, 같은 날 오후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진행된다.

▲김관영 도지사의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위한 행보

전북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문화 올림픽을 열어 국위선상에 기여하고 지역 분권 발전을 통해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는 유치 프랜차이즈(PT)를 진행할 예정이다.

▲3·1절 기념식 및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김관영 도지사 일정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3월 1일 오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을 기리며, 오후 2시에는 대한체육회 총회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열린 행정 실현, 도민과 소통 강화

전북자치도는 수시 도정 현황에 대하여 널리 알려져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밀실 행정을 지양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2036 올림픽 유치 활동을 포함해 전북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도, 정치 꿈나무 양성소로 전략… 개선해야”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등도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이 지난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섰다.

▲염영선 의원, “정치 꿈나무 양

성소로 전략한 전북도, 개선 해야”

먼저, 염영선 의원(기회행정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전북자치도가 정치 꿈나무 양성소로 전략했다고 질타하며 김관영 도지사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염영선 의원은 “도지사가 직·간접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과 감사위원장이 2026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3년이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직했으며, 모 출연기관 원장 역시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의 수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기관 운영 효율성 저하, 정책 결정 지연과 실행력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 “와상장애인의 정

확한 실태조사와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 해야”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중증 와상장애인은 심한 장애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도내 한 대도 없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고



염영선 의원



정종복 의원



이병도 의원

있는 상황이다”며, “도 차원에서 사설구급차 이용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들이 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은 또 “와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동 패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 도내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필요성 주장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전북자치도 내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주일 후면 3.1 독립만세운동 106주년이고, 올해는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을 맞이하는데 독립운동 정신을 후손들이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전북은 항일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추경 편성하라”

국주영은 도의원, 건의안 발의… “다양한 연구 결과서

자본 역외유출 방지·지역소비 증진 효과 인정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이 지난 21일 진행된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조속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 대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부정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조차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는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에서 만나는 많은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하라”

김대중 도의원,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중심 정책기조로 전환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 정책기조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서울공화국만을 유지·발전시키는 수도권 중심 정책기조에서 지방 중심 정책기조로 서둘러 전환하지 않으면 초저출생, 초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도로 된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라며 “제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5년 공공기관 지



방이전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전국 405개 공공기관 중 85%인 346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한 가운데 176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고

통폐합했다. 이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총 153개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로 1차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중 절반 정도를 지방으로 이전한 셈이다. 이후 정권교체,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나머지 남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작년 9월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담은 ‘혁신도시 성과평

가 및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음에도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설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기조는 더욱 굳건해지고, 수도권 초집중화가 가속화되었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지방은 쇠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하루속히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 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이 이전에 균형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